대기업에 밀리고 중국산에 치이고…대책은 수년째 ‘재탕’

시들어가는 광주 김치산업 현주소

광주시가 25년에 걸쳐 최소 7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광주 김치산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 340억원을 들여 김치타운을 지은데 이어 지금껏 200억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매년 김치축제를 열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광주 김치는 위상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되레 뒷걸음치는 모습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현 상황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허재호 세계김치연구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서삼석 의원 주최로 개최될 ‘국산 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 세미나 발제문에서 “김치산업은 상품김치 사장 규모 성장세가 지속하고, 저가 수입김치 수입량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내 상품김치 생산량은 지난 2016년 44만t, 2017년 45만t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중국산 수입김치의 경우 2010년 19만t에서 2018년 29만t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고려한 발언이다. 대상, 삼진, CJ 등 대기업 상품김치 생산량은 매년 늘어나고, 저가 중국산 김치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게 허 소장 등 김치산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2~3배 비싸더라도 맛있고 안전하게”

사업 재검토…광주만의 전략 세워야

김치산업은 하루가 달리 변화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20여년간 기존의 김치산업 육성 방식을 고수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만 있는 모습이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이 “광주 김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고민한 후 광주 김치만의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정립해야한다”고 최근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원뿐 아니라 김치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상품김치보다 2~3배 비싸더라도, 맛있고 안전하다면 광주 김치가 통할 것”이라는 의견을 비롯해, 광주만의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걸 맞는 지원을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중국산 김치와 대기업 상품 김치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광주만의 김치 산업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전시성·홍보성·일회성 사업에 쓰고 있는 광주시의 김치산업 관련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3억원을 들여 추진할 김치산업 육성사업 계획만 보더라도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관성대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 1년간 ▲찾아가는 광주김치 홍보단 운영지원 ▲김치업체 판로지원 ▲광주김치 관광상품화 지원 ▲광주김치 사용인증제 등 8가지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육성 의지를 밝힌 ‘광주 11대 대표산업’에 김치산업 등 음식산업을 넣은 것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기업 김치와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광주 김치산업을 어떻게 키워가겠다는 구체적 비젼이나 세부계획은 보이지 않고, 이 시장의 김치산업 육성 의지만 담겨있어 공허하기만 하다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임암동에 지난 2010년 문을 연 김치타운은 김치박물관, 김치공장, 김치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혈세 350억원을 쏟아 부어 만든 김치타운에서는 입주공장이 시설 위생 불량으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서 탈락하고, 업체들은 번번히 시설 사용료조차 내지 못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지명자 윤석열

최대과제는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완수

수사권 조정·조직관리 능력 시험대

선배 기수 옷벗는 관행 탈피 목소리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온 만큼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구조 개편작업이 차기 검찰총장 지명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직후 이뤄질 후속 인사는 윤 후보자의 조직관리 능력과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 꼽힌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검찰 관행대로라면 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0여 명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19~23기는 30여명으로, 이 중 호남출신은 조은석 법무연수원장(19기·장성)을 비롯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20·영광), 박균택 광주고검장(21·광주), 윤웅걸 전주지검장(21·해남), 양부남 의정부지검장(22·담양), 김우현 인천지검장(22·여수),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23·고창), 고기영 춘천지검장(23·광주), 송삼현 제주지검장(23·고흥) 등 9명이다. 윤 후보자가 예정대로 다음 달 25일 취임할 경우 검사장급 이상 후속 인사는 8월 초순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급 이상 간부 30여 명이 동시에 검찰을 떠날 경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윤 지검장의 동기 또는 선배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후보자의 나이가 선배 기수보다 적지 않은 59세라는 점도 선배 기수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심각한 인사 소외를 겪어 겨우 자리만 보전해온 호남출신 간부들을 중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경찰 등에 넘겨줘야 하는 현실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을 다독이는 게 윤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내부 제도개선 작업과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의지·60억대 재산 쟁점될 듯

수사권조정·적폐수사 질문 집중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는 등 6월 국회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그동안 검·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윤 후보자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는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90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소신·정면돌파 스타일 ‘강골중 강골’

검찰총장 직행 윤석열은 누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년동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서울 출신이지만, 일각에선 조부와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는 점을 들어 ‘충청’ 인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후보자는 1994년 다소 늦은 34세라는 나이에 ‘늦깎이’ 검사가 됐다.

그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검찰에 재임용 돼 광주지검 검사 등을 거쳐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검사생활 곳곳에도 그의 이 같은 성향은 고스란히 묻어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다. 그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윗선의 반대에도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소신 있는 수사를 강행했고,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이른바 한직으로 취급받는 곳을 전전하게 된다. 당시 국감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지목돼 수사 일선에 다시 복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